

| 토론회지상중계 |

지역 사회적 대화 토론회

지역을 잘 아는 지역 노사의 사회적 대화 참여 절실

김진구 실무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역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검토와 함의”, 2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 구상”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이 진행되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토론회의 개최사를 통해 “중앙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역과 업종이 같이 결합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개최사를 통해 “노동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 준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미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용해야

이어 토론회 1부의 첫 순서로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서울시 경험과 그 함의’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노 위원장은 우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수행,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시행 등의 예를 들고, 이 같은 정



책이 성공한 이유로 리더십의 확고한 의지,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노동행정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사례가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성공적인 노동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고용노동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 충남 사례와 그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일단 지역에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함께 중앙집권적인 고용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지역 노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는 있지만, 충남의 사례를 돌이켜 볼 때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조성주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회 산하에 있는 서울모델협의회가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사관계 조정이나 노동이사제 도입에서 큰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때문에 서울모델협의회를 살리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서울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고, 이후 위원회 산하에 금융, 교통, 보건 등의 업종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창운 울산시 노동특보는 울산의 제조업이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기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울산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자동차, 조선, 플랜트 업종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산업에 닥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지방분권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주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근이 사회적 대화의 명맥을 이어온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중 마지막으로 이원복 노무사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과 중앙 경사노위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중앙정부,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하되 간섭이 되어서는 곤란

토론회 2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 구상”이란 주제에 대해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가 “지역 사회적 대화 체제 쇄신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이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결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2부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협 대구대 교수는 일단 그 동안의 지역 사회적 대화는

지역의 주체가 의지도 능력도 결여된 상황에서 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시킬 방법, 즉 지역의 주체를 대화에 참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런 의제에 대해 지역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위한 지역 연대나 고용연대기금 같은 실천적 방안이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정책의 지역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중앙의 사회적 대화가 연계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끌어 갈 사무국의 역량강화와 지역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부천시 지역 노사민정을 상대로 한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가능한 노동정책의 영역이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지방정부들이 소외된 노동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센터나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여 대응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봉제, 플랫폼노동, 아파트 경비 등의 영역에서 노사정이 만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홍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조정 시기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와 관련된 고용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지역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임기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앙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제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의 제1관심사는 현재 지역 일자리인데, 지역산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 노사가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고, 정부는 그들의 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